



변혁기의 우리 농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권영근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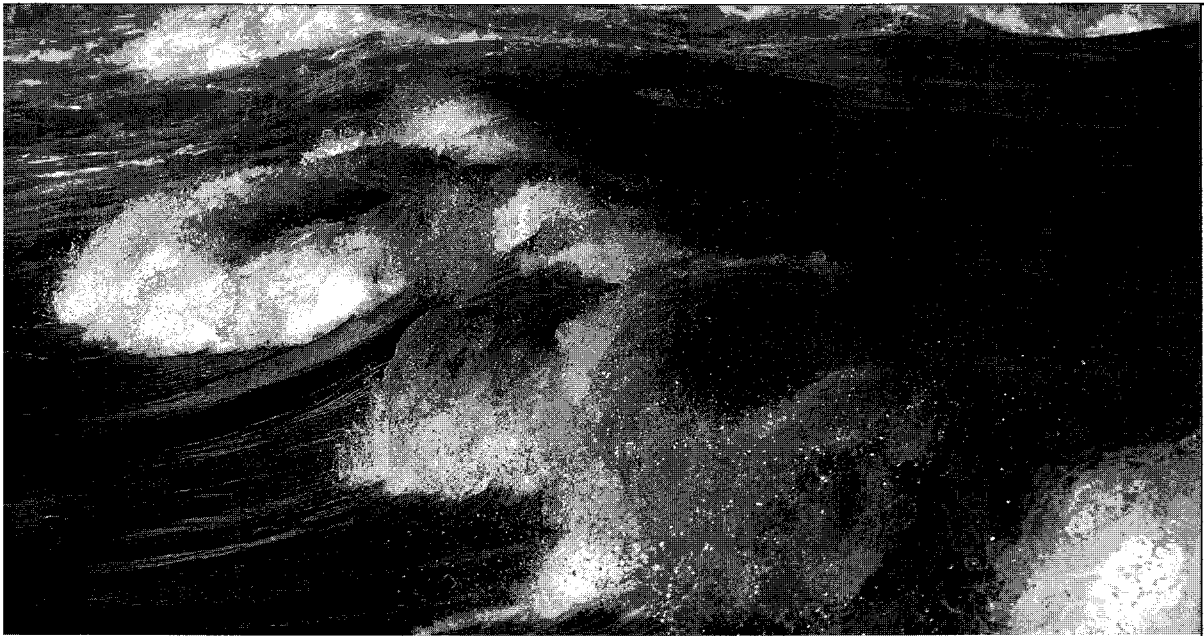
우리 농업을 둘러싼 주·객체적인 여러가지 조건과 자연적 및 사회·경제·문화적 여건들은 우리 농업의 변혁을 강요하고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과 그에 대한 인식의 틀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농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도, 농업이 토대를 두고 있는 자연적 및 자연과학적인 조건들도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것도 쉽게 변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농업 그 자체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등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 특히 WTO체제 하에서의 21세기적 시대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착·확립된 과거의 관행들에 대한 수구적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변혁시대에 변혁되지 않으려

는 갈등의 모습이 우리농업의 현주소라고 하겠다.

변혁을 요구하는 무엇

21세기 농정을 선도하고 있는 WTO체제 하에서 농업변혁을 강요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20세기 세계 농업공황으로 발생한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격·소득지지 정책의 지속적 전개로 형성된 식량의 대량생산을 위한 '녹색혁명형 농업' 체제에 있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토대를 둔 수출국의 농산물 과잉생산은 세계시장의 농산물 과잉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각국의 가격·소득지지정책과 그를 수행하기 위한 수입국의 수입제한정책 때문이라고 진단되고 있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인한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생산체제를 해결하기 위해 GATT-UR협상을 거쳐 WTO체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WTO체제는 녹색혁명형 농업에 기초한 각국 국내의 과잉생산체제에 대해 변혁을 강요하고 있으며 세계시



장에서의 과잉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TO체제는 비관세장벽 등 국경보호 조치와 가격·소득지지 정책 및 생산자극적·무역 왜곡적정책 등 20세기에 수행되었던 농정체계의 부정과 철폐를 강요하고 있다.

'농업·공업생산의 기본법칙'의 본질적 차이

생명이 있는 것들의 상호 유기적 순환관계 위에 성립하는 '농업생산의 기본법칙'과 생산 과정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완전하게 관찰시킬 수 있는 '공업생산의 기본법칙' 간에 존재하는 상호대립적인 본질을 망각한 채 추진된 '농업의 공업화 전략'은 녹색혁명형 농업을 확립시키게 되었다. 대사와 증식기능을 갖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면 농업생산의 기본법칙이 관철되는 분야는 생명체의 생산과 폐기·순환을 다루는 분야로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공업생산의 기본법칙이 관철되는 분야는 뉴턴의 기계적 역학이나 열역학 제 1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혼돈 또는 농업의 공업화 전략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농업의 공업화 전략에 토대를 둔 녹색혁명형 농업은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파괴하고 농촌 내의 계층 간 격차와 농촌 내의 조건이 유리한 지역과 조건이 불리한 지역 간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격차 등 4종의 격차와 종자종속과 금융종속, 식량종속, 석유 에너지에 대한 종속 등 4종의 종속을 초래함으로써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반(反)생명적 생명활동 방식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녹색혁명형 농업은 우리의 농업현실을 농자재·에너지 다투입형 농업, 시설이용형 농업, 중화학 농업, 에너지 고투입형 농업으로 변화시킴으로서 WTO체제 하에서 부채가 구조화 된 농가경영으로 인해 농촌의 역사·문화 및 생태계, 자연경관 등의 지속가능성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 따라서

“

WTO체제, 국경보호조치와 20세기 농정체계의 부정·철폐를 강요 21세기 시대흐름은 협동의 지역사회체계 구축, 이는 곧 ‘기회’

”

녹색혁명형 농업의 지속은 부채가 구조화 된 농가경영을 개선시킬 방법이 묘연하다.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대안에 관하여 근본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생활공간의 확대는 엄청난 폐기물 처리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녹색혁명이란, 우성인 잡종 1대(F1) 강세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수확 품종과 석유에 기초한 비료, 농약 등 각종 농화학 자재, 수분관리를 조화시킨 팩키지 기술이다. 이러한 녹색혁명 기술은 정확한 토양 수분조건이 경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혜택받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육종의 기본방향은 다수확을 목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다수확에 적합한 소수의 재배식물에 개량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세계의 식료생산과 인류에 대한 식료공급은 소수의 작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로서 식료공급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식량의 수입의존도를 높였으며 식료부족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식료 및 종자 종속도를 엄청나게 심화시켰다. 가뭄과 습한 곳에 약하여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다수확을 하려면 농약을 많이 주거나, 물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목적 댐 등 관개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녹색혁명을 통한 다수확을 위해서는 균일성 높은 품종과 그에 적합한 고도의 농업방식이 대규모로 요

구되어 진다. 그러나 이 같은 유전적 균일도가 높은 품종은 유전적 취약성이 있어서 새로운 병해충이 빈발할 위험성이 높다. 녹색혁명에 의해 우수한 품종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 그만큼 유전질의 균일화가 초래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녹색혁명은 석유에 토대를 둔 농업구조를 창출한 것으로서 이후는 석유가 농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녹색혁명에 의해 창출된 농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다투입형 농업, 비닐하우스 등 시설 이용형 농업, 중화학 농업으로서 농촌지역의 생태계 교란과 환경파괴를 통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을 경영하려면 자금이 많이 요구되므로 금융에 대한 종속도가 높은 농업이라는 점과 다수확 품종의 개발에 의존함으로써 종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종자의 종속도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종 농업용 시설·자재의 원료인 석유에 의존하는 농업으로서 ‘원격지간 물질순환 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종자도 다국적 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지역내 물질순환 체계’를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녹색혁명에 의해 구축된 원격지간 물질순환 체계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자유무역이 강화되면서, 원격지에서 수입한 석유나 화학물질 및 사료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함으로써 수입국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

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내 물질순환 체계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원격지간 물질순환 체계는 수입국의 생태계를 교란·파괴함으로써 안전한 식료의 공급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여 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탐구'이다. 녹색혁명에 대한 초기의 비판은 격차와 불평등을 창출했거나 강화함으로써 이농과 갈등 및 농업축소를 유도했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 다음 단계의 비판은 화학자재의 광범한 살포로서 농촌지역의 환경, 생태계 파괴, 건강·보건과 환경적인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비판으로는 녹색혁명을 위한 공공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공익적 편익의 정도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녹색혁명에서는 석유 에너지에 토대를 둔 화학자재의 다투입이 전제로 되고 있으므로, 농업의 지역성과 역사성 및 생태적 영향이 경시되고 있다. 그 결과 화학자재 다투입형 농업, 시설 이용형 농업, 중화학농업, 다수확의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자원량(input)에 대한 수확량(output)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마이너스로 되면서 농가 부채가 향상화 하는 구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녹색혁명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저가격 체제를 구축했고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유통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는 작물의 종류를 단순화시킴으로서 식료의 수입의존도를 높였으며, 소수의 다수확 품종 중심의 생산체제는 종래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농업체제를 파괴하여 다양성을 축소했다. 작물 종류의 감소와 더불어 주요 작물에서 근대품종에 의한

재래품종의 추방은 유전자원 혹은 유전질이 상실되는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작물진화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재배집단의 균질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의 취약성은 증대하게 되고, 병해충의 빈발은 비료, 농약에 토대를 둔 과도한 화학자재의 투입을 초래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파괴하는 기본적 원인인 녹색혁명으로 인해 석유 의존형 농업이 확립되면서 중화학 농법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도시화의 확대에 의한 농촌지역의 축소, 그 폐기물의 농촌지역 살포,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한 중화학물질의 폐기 등으로 농촌지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로 뒤덮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생산성을 지속시킨다는 측면의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과 농업=생물=생명의 관계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상호의존의 상생관계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재배식물 다양성의 지속성, 유전자원 풍요성의 지속성, 유전질 풍요성의 지속성, 축적된 생물유산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21세기의 시대흐름은 '지역'

20세기의 농정체제를 부정하는 WTO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지역농업·환경보전형 농업·조건불리지역 농업'이다.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공적(共的) 섹타로서 협동조직이다. 협동의 지역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는 협동조직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지역농업의 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농약정보**